

데스크 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어머니 혹은 아내로 자신을 한정하지 말라. 스포츠에서도 출산한 여성이 한계를 극복하고,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다.” 자메이카 여성 육상선수 프레이저 프리리스(35)는 2017년 아들을 출산했다. 그리고 이듬해 트랙에 복귀한 뒤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뛰었다. 이후 2019년 도하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100m에서 10초71을 찍고 우승을 차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100m 2위, 200m 4위, 400m계주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은 출산하면 선수 생명이 끝난다’는 편견을 깬 위대한 도전이었다.

임신·출산은 라이벌보다 무서운 적

최근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 서구청 펜싱팀 강영미(36) 선수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운동선수로서 당연한 목표였거나 생각하고 물었다. “3년 뒤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거죠?” 잠시 머뭇거리던 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내년 아시안 게임까지는 남편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까지 간다고 신문에 나면 남편이 무척 당황할 것 같습니다.” 강영미는 지난 2015년 결혼했지만 출산을 미루고 있

‘스포츠 우먼’과 ‘스포츠 맘’ 사이에서

다. 그는 “솔직히 지금도 아이 낳고 선수 생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출산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나를 기다려 주는 팀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다면 ‘선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평 울지도 모른다.

남녀 선수를 불문하고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야 한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규정 대회에서 성적을 올리고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 선수들은 임신과 회복 기간 동안엔 아예 출전 기회마저 없다. 출산 후 육아는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난관은 컨디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난 몸이 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혼한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의 공통 고민이 여기에 있다.

‘허들 여제’ 정혜림(34)도 예외가 아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2011년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복귀하는 시기가 애매해지다 보니 아예 출산을 미루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난 7월 2021 고성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일반부 100m 허들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올해만 모두 네 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를 이길 선수는 없다.

그가 이처럼 경기력에 몰이 오면 전성기임에도 과감히 모든 걸 포기하고 출산을 감행할 수 있을까. 여자 선수에게 출산은 삶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나락일 수 있다. 중앙일보 박소영 기자는 “아이를 갖는 순간 20-30

년간 쌓은 경력은 단번에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 임신·출산·육아는 라이벌보다 더 무서운 적”(나라경제 330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혜림에게 남편인 김도균(42) 육상 국가 대표팀 코치마저도 쉽게 출산을 권유할 수는 없다. 김 코치는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따낸 우상혁의 스승이기도 하다.

녹록지 않은 ‘결혼과 선수 생활 병행’

여자 스포츠인들은 다양한 편견에 포위돼 있다. 대표적인 게 출산과 관련한 것들이다. 기존 남자선수들에게는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 플레이가 더 안정적이고 좋아졌다’고 종종 말한다. 하지만 기존 여자 선수들에게 “애 낳고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플레이가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궁(神弓)으로 불렸던 광주시청 기보배는 2018년 출산 후 활터에 복귀해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8회 올림픽제패 기념 회장이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간의 평가는 ‘출산후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로 압축된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여자 운동선수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기존 남자 선수들에 견주면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셈이다. 운동을 자신이 선택했으니 출산 후 경기력을 회복하는 것 또한 모두 선수의 책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스포츠 우먼과 스포츠 맘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 선수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우리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수많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상대 후보들이 주장하는 검증 내용을 매일 접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일류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은 더욱 탄탄히 발전시키고 변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사에서 독재정권이나 부패 정부를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국민 주권이 보장받는 권력 체계로 변화시키고 위대한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투쟁하였지만 성공한 국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한 결과를 얻는 데는 국민들의 정치 수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언제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직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사익이 아닌 공익과 국익을 추구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뛰어드는 후보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저마다 주장하고 이를 검증받는다. 그런데 후보로 등록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국방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펼쳐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평가받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은 정치 초보니까 기다려 달라”거나 어떤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고 “다음 번에 관련된 의견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거의 평생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탐하는 것일 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지도

력만 있으면 되고 정책은 각 분야의 사람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적으로 왕이 무능하면 그 주변의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우리도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에게 여러 권한을 남용하게 하여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권한과 권력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에 따른 무한의 책임이 있다.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누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자들에게 휘둘러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오랫동안 오롯이 자신만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검증하고 선출해야 한다. 기업 대표도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인기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국가를 행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선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기 고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개발 실장

국내에서 생소했던 영농형 태양광이 시작된 지도 벌써 6년째다. 영농형 태양광의 기본 콘셉트는 광포화점 이상의 햇빛은 작물이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 태양광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지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면적에 30% 정도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농지에서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를 3m 이상, 가로 세로 기둥을 4-6m 간격으로 설치해 농지에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확산되지 못하고 50여 개 사이트에서 소규모 실증 연구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계통 인프라 부족, 주민 수용성, 농지법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농지법이다. 지난 2018년 9월 정운천 당시 의원의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박정·장병완 의원 등이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농지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진흥구역 사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지자체장과 농민단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 들어와 위성곤 의

농촌의 새로운 희망 ‘영농형 태양광’

원 등이 지난 3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꺼져 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솔라팜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영농형 태양광 관련 최초 국가 과제를 시작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7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20개 실증 사이트에서 참여업체와 농업관련 기관, 대학 등과 함께 버·갑자·양파·마늘·배추·깨·녹차·사료작물·배·포도·무화과 등을 재배했다. 실증 결과 태양광 모듈이 만드는 그림자의 영향으로 논밭 작물은 생산량이 2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과수 작물은 동일한 수준의 당도나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는 1-2주일 정도 지연 수확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100kW의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6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80kg 12가마가 나오던 것이 10가마 정도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시가로 24만 원의 손해를 입는 셈인데 태양광으로 인한 연 소득이 84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1년 수익은 6배에 달한다.

사실 농촌에서 농지의 생산성을 이처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닐하우스였다. 비닐하우스는 고 박해수씨가 1960년 김해에서 시작한 것이 최초다. 오이·가지·고추 등의 시험 재배에 성공하며 ‘백색 혁명’으로 불리었다. 50년이 지난 현재 무려 8만 3000ha로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5.2%에 달할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이 비닐하우스도 처음 도입기에는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농형 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 ‘일리 어담

터’ 농업인들의 성공 사례 전파, 인허가 절차의 대행 및 간소화, 안정적인 지원 정책들이 기반이 된다면 비닐 하우스 같은 성공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 전 세계 1위는 253.4GW로 중국이고, 일본도 71.4GW 세계 3위이다. 우리나라는 15.9GW로 9위이다. 중국과 일본은 태양광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선진국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결이 다르긴 하나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남은 공간에 농사를 지어 농촌을 살찌우게 했고,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비좁은 일본은 2006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해 벌써 4000개소가 넘게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RE) 3020 계획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34GW로 늘리기로 했고, 최근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25GW를 새로 지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최소 2GW에서 최대 13GW의 태양광을 매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태양광 사업은 거대 자본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익을 독식했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정작 농업인들은 사업에서 소외시킨 것이다.

농업인이 태양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몇 십 년 후 영농형 태양광이 비닐하우스와 같이 농촌의 한 풍경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다. 영농형 태양광, 이제 농촌에 새로운 비닐하우스가 될 것이다.

社說

눈물의 자영업자 지원 다양한 정책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속속 문을 닫고 있다. 40년 가까이 돈가스를 판매하며 광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어느 유명 음식점도 결국 손을 들어야 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중 폐업을 한 곳은 892곳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별로 보면 1월에 106곳, 2월 94곳, 3월 148곳, 4월 162곳, 5월 156곳, 6월 126곳, 7월 100곳으로 월평균 100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 매일 세 곳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반음식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및 연장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밤 10시 이

후 영업 중단(포장만 허용)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속속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이다.

음식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광주 지역에 1039곳 있었던 노래방은 올해 5월 984곳으로 5.29% 줄어들었다. 전남 지역도 725곳에서 698곳으로 3.72% 줄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들도 폐업의 쓰나미를 피해 가지 못했다. 예식장 업주들도 49명까지 참석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월 평균 100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 매일 세 곳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자영업자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방역 수칙에 의한 피해와 고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때다. 임대료 지급을 유예해 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행이 장기화되면서 전남 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전남 지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며,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기반도 취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으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엔 적극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 우선적으로 의대가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밀려 두 달 만에 원점 재검토 선언이 나온 뒤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앞서 전남도와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정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해 왔다. 도민들이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였다. 전남 지역의 기대수명은 80.7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241

만 원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도 의료 접근성은 취약하기만 하다. 전국 응급의료 취약 시군 99곳 가운데 17곳이 전남에 쏠려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는 뇌혈관·소아외과 0명, 응급의학과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이로 인해 연간 80만 명의 도민이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찾으면서 1조 5000억 원이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전국 섬 가운데 65%인 2165개가 전남에 산재해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하지만 의대 신설이 미뤄지면서 섬 지역 등에서는 아찔한 응급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료 여건이 가장 열악한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만 운영되는 불균형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의사단체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을 손에 넣었다. 미군의 철수 발표 후 불과 4개월 만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던 아프간 전쟁도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면서 수도 카불에서는 대규모 엑소더스로 혼란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카불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보도되

면서 전 세계가 경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엑소더의 배경을 보면, 과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집권했던 시기에 그들의 야만스러운 공포 정치를 떠올리는 아프간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규율로 집권하면서 언론 탄압, 종교의 자유 억압, 그리고 여성 탄압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 및 사회 활동 전면 금지, 심지어 여성 혼자 또는 여성들끼리 외출하는 것도 막았다. 끔찍한 사형 제도 등 각종 형벌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아

프간 국민들은 또 다시 탈레반의 강력한 통제 속에 인권이 유린되는 암흑기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목숨을 내걸고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전쟁으로 인해 피로 얼룩졌다. 1973년 친소 쿠데타로 시작된 내분과 내전, 1979년부터 10년간의 소련 침공,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진 내전, 1996년~2001년까지 탈레반 통치, 2001년부터 20년 간 미국과 아프간 전쟁을 겪어야 했다. 이제 아프간

은 탈레반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 탈레반이 과거 통치기 때와 같이 과

포의 정치를 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프간 국민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인권과 여성 권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간의 탈레반 집권에 따른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외교적인 변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